

배포 일시	2022. 6. 3.(금)		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실 물류산업과	책임자	과 장 박진홍 (044-201-4016)
		담당자	사무관 정일웅 (044-201-4018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‘집단운송거부’ 는 해법이 아닙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합니다.

- 정부와 대화 노력에도 집단운송거부 결정에 유감,
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6월 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,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.
- 정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화물차주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
- 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, 최근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,
-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국내경기를 위축시키는 물론,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국토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은 다음과 같다.

① 뚜렷한 명분이 없는 소모적인 행동

□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말하고 있는 “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”, “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”, “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”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물연대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.

○ 먼저, 주요 요구사항인 “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”와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화주, 운송사, 차주의 의견이 첨예함에 따라 지난 5월 30일에 열린 “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”를 시작으로, 6월 초부터 “안전운임 TF”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었다.

□ 이와 함께,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펼쳐왔다.

○ **(유류비 부담경감)**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화물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에 더해 지난 5월부터 별도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, 6월부터는 지원 금액과 지급기한도 확대하였다.

○ **(소통협의체 운영)** 또한, 지입제 등 화물운송업계의 각종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“국토부-화물연대 월례협의회”, “화물운수업계 협의체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.

○ 이처럼, 정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으며,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.

②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

-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돌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, 차량 파손 등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, 경찰과 협조하여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.
-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·형사상 책임을 묻고,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,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.

③ 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물류피해 최소화

- 정부는 경찰·해수부·산업부·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여,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.

* (해수부) 항만 장치능력 확보, (산업부) 시멘트 등 운송물량 사전수송, (국방부) 군위탁 차량 투입, (지자체)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, (물류업계) 긴급화물 사전수송, 대체수송수단 확보 등

- 또한,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물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.
- 화물연대의 운송방해·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·ICD·고속도로 요금소,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 및 112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,
-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군, 지자체, 물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할 방침이며,

- 필요 시 철도공사의 컨테이너·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하고,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한 대체수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.
- 또한, 운송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기간 중 10톤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.

※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국토부 중앙수송대책본부 : 044-201-4801~4805

- 한편,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다시 한번 요청하고,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하면서,
- 화물연대와 지금까지 화물운송시장의 여러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던 것처럼,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.



참고 1

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·환불 계획

□ 통행료 면제

- (면제기간) '22. 6. 7(화) 00:00 ~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
- (면제구간) 고속도로 **쏘구간** (민자고속도로 포함)
- (대상차량) 국토부 지정 **대체수송차량**으로
식별표지 및 **통행료 면제확인증**을 발급받은 차량
- (면제방법) **하이패스**는 정상 납부 후 **사후 환불**
* (선불카드) 사후 충전, (후불카드) 카드사 미청구
일반차로는 **즉시 면제** (식별표지 부착, 면제확인증 제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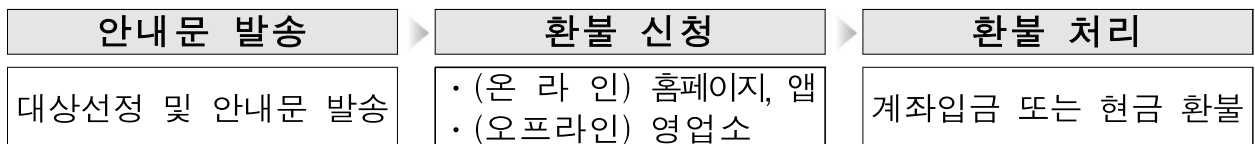
※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**식별표지**를 부착하고, **통행료 면제 확인증**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

□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

- (발급장소)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**쏘 영업소** (367개소)
- (발급시간) **09:00 ~ 18:00** (주말·공휴일 포함)
- (발급방법) **자동차등록증** 및 **신분증** 지참 영업소(사무실) 방문
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(전산등록·출력)

□ 통행료 환불

- (환불대상)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
*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
- (환불시기)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
- (환불절차)



□ 문의처 :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-2504

참고 2**통행료 면제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 서식**

- 식별표지** : 차량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부착

No. 예)1-23 (차량부착/게시용)

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차량

- 사용기간 : 2022. 6. 7. 00:00 ~ 정상화 시까지
- 차량번호 : _____

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

국토교통부장관 (인)

- 면제확인증** :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제시

No.

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인증

- 사용기간 : 2022. 6. 7. 00:00 ~ 정상화 시까지
- 차량번호 : _____
- 면제구간 : 모든 고속도로(재정·민자 고속도로)
- 이용방법 : 요금소 부스 제출 후 통과

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

국토교통부장관 (인)